



# 국내·외 축산소식



## 한우농가, 호주산 소 입식 저지

남 고흥군 한우협회 회원들이 호주산 생우(生牛) 입식을 물리적으로 저지했다. 한우협회 회원 50여명은 19일 오후 7시30분께부터 고흥군 도화면 성곡리 마을 입구에서 호주산 소 250여마리를 실은 트럭 20여대를 트랙터로 가로막고 소 반입을 저지했다.

경찰과 소 수입업자는 농민을 설득하며 소 반입을 시도했으나 농민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날이 어두워지자 이날 오후 9시께 경찰은 철수했다. 농민들은 이에 앞서 오전 5시30분께부터 고흥군 동강면 한천리 국도에서 생우를 실은 차량을 14시간 가량 농기계로 막았다.

이들은 “수입소가 들어올 경우 한우 사육 기반 붕괴와 전염병 유입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생우는 이달초 인천항을 통해 수입됐으며 도화면 이모(45)씨 농장에 입식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 [미국] Omaha Steaks사, 고급 쇠고기 소매판매 시작

Pittsburgh시 시내에 고급 주택들과 고급 사무실들

이 들어서면서 온라인에서 최고급 쇠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Omaha Steaks사가 그 지역의 오프라인 식료품 매장에서 자사의 쇠고기 판매를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이직 매장의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매장은 Omaha사의 최고급 쇠고기 제품 이외에도 각종 고급 농산물들이 진열될 것이다. Omaha Steaks사의 대변인은 “그 매장은 Omaha Fresh제품과 Omaha Fresh Angus 제품도 판매할 것이다. 그 밖에도 고급 농산물을 판매하는 두 개의 다른 소매유통업체 매장에도 Omaha사의 제품이 진열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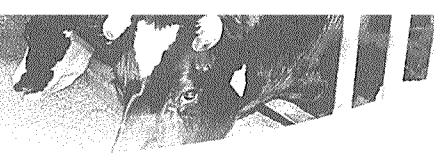
[MMT]



## 미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여야의원 공동 결의안 채택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를 위해 여야 의원이 함께 나섰다.

지난 18일 오전 9시30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 강기갑의원을 비롯해 남호경 한우협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최영열 양돈협회장은 공동으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특히 이날 결의안은 여야 의원 39명이 공동 발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여야가 당을 초월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평가된다.

이날 강기갑의원은 "미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일본과 홍콩 등은 수입 중단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발병우의 나이 확인 후 바로 수입재개에 들어갈 것이라 말하고 있다"며 "이에 여야 의원의 뜻을 모아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남호경 회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농가와 정부의 노력으로 BSE 청정지역을 유지해왔으며, 지금까지의 노력이 미국의 압력으로 힘없이 무너지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결의안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지 수입을 중단해야 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에 부합하는 새로운 수입위생기준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다음과 같다.

▲열린우리당: 김원웅, 김재윤, 변재일, 신학용, 장영달, 최규성, 문학진, 장복심, 임종인(이상 9명) ▲한나라당: 권오을, 김학원, 박세환, 배일도, 이강두, 정문현, 정병국, 홍문표, 김영덕, 이인기, 김애실, 허천(이상 12명) ▲민주당: 손봉숙, 이정일, 최인기, 한화갑(이상 4명) ▲민주노동당: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이상 9명) ▲국민중심당: 김낙성, 류근찬, 이인제, 정진석, 신국환(이상 5명)

[축산신문]



## 印尼 25번째 AI 사망 확인

인도네시아에서 25번째 조류인플루엔자(AI) 사망자가 나왔다.

인도네시아 보건부 관리리는 이달 8일 수도 자카르타의 한 병원에서 사망한 24세 남자가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관리리는 어떤 경로를 통해 AI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감염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AI의 인체 감염이 확인된 국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터키, 이라크, 이집트를 포함해 모두 9개국에 달하고 사망자도 최소 110명에 이른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금까지 33명이 AI에 감염됐으며, 이 중 25명이 목숨을 잃었다.

[자카르타 AP.교도=연합뉴스]



## 냉장돼지고기 수입 2년새 10배 급증 ... 국내 시장 잠식 가속

냉장 돼지고기 수입량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국내 외식시장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수입된 돼지고기 17만여t 가운데 냉장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양은 6,420t이다.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 중 냉장 돼지고기의 비중은 3.7%에 불과하지만 수입량 증가 추세를 보면 가히 폭발적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냉장 돼지고기 수입량은 2003년 516t에서 2004년 2,410t, 지난해는 6,420t으로 2년 사

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286t, 2월 469t, 3월 668t으로 수입 증가세는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달해 앞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타결될 경우 양돈산업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관계자들은 국내 외식산업이 발달하면서 일반 음식점들이 수입 돼지고기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면서 외국산 냉장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바뀔 경우 일반 유통업체들이 앞다투어 수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럴 경우 외국산 돼지고기 가운데 냉장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는 일본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외국산 냉장 돼지고기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정규성 축산유통연구소장은 “외국산 냉장 돼지고기의 경우 삼겹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넘는다”며 “값은 국내산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맛에는 그다지 차이가 없어 외식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돼지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고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하려는 양돈농가들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농민신문]



### 美 “FTA 협상시한 맞추려 양보하진 않겠다”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미국측 수석대표는 19일 “협상 테드라인도 중요하지만 우리(미국)는 단지 협상시한을 맞추기 위해 목표를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워싱턴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다이얼로그(GBD)와 한국경제연구소(KEI)가 공동주최한 한미 FTA 토론회에서 이같이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한미 FTA 협상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17일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마지노선이 지켜지지 않으면 한일 FTA협상처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측 수석 대표의 이 같은 주고받기식 강경발언은 일단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협상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되지만 양측 모두 타국과 FTA협상을 중단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한미 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결렬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토론회에서 최석영 주미한국대사관 경제공사는 한-칠레 FTA가 9개월, 한-싱가포르 FTA가 6개월 소요된 점을 거론, “시간이 촉박한 것은 아니다”면서 “한미 양측이 이슈와 문제점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 자체는 장애물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한미 FTA 협상과 관련, 미 의회에서 미 행정부에 부여한 신속협상권한(TPA) 시한을 감안할 때 늦어도 내년 3월말까지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또 이날 토론회에 미 의회를 대표해 참석한 상원 재정위원회 관계자는 한미 FTA협상에대한 의회의 최대 관심사는 쇠고기와 자동차임을 언급한 뒤 특히 “쇠고기 문제는 미 의회에 많은 우려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미 의회에는 한국측에서 상당 정도 시간을 질질 끌어왔다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공사는 지난 1월 양국 협상에서 1998년 5월 이후 사육된 소에서 광우병이 재발할 경우 수입금지한 뒤 다시 안전성을 검증키로 합의했던 사실을 상기 시키며 한국측이 쇠고기 수입을 지연시키고 있다



는 지적을 반박했다.

[연합뉴스]



### 양돈업 환경규범 제정된다

양돈업 환경규범이 제정될 전망이다.

대한양돈협회는 지난 14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축산환경대책위원회(위원장 최영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 본격적인 지정활동에 돌입을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농림부와 축산연구소, 학계, 양돈농가 등은 양돈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개선 운동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양돈인이 지켜야 할 사항 가운데 최소한 수용 가능한 규범을 만들어 스스로 실천하도록 계도함으로써 양돈인의 의식을 높여야 할 것으로 분석, 양돈업 환경규범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따라 환경대책위는 양돈협회가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 양돈업 환경규범을 제정하는 한편 이를 준수하는 양돈농가들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요구기로 했다.

또한 전국 양돈인대회 등을 통한 환경규범 채택과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는 물론 정부 시책화 및 의식함양 교육을 위한 행정지원 요청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최영열 회장은 이와관련 "환경규범 제정 및 준수를 통해 양돈업에서 초래될 수 있는 환경민원문제 해소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농장이미지 개선에 큰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며 "양돈업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산업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중심 역할이 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 日서 25번째 광우병 감염소 확인

일본에서 25번째 광우병(BSE) 감염소가 확인됐다.

후생노동성 전문가회의는 일본 서부 오카야마(岡山)현에서 사육된 젓소 한 마리가 광우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문제의 젓소는 5년생 홀스타인종으로 당초 식용으로 도축될 예정이었으나 검사 결과 광우병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일본에서는 올해 3건을 포함해 2001년 이후 모두 25건의 광우병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일본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뒤 2년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다 지난해 12월 이를 해제했으나 불과 한달만에 미국축이 안전 기준을 어겼으며 수입을 다시 중단한 상태다.

[연합뉴스]



### 닭고기시장 '진퇴양난'

국내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닭고기 수입량이 크게 증가해 닭고기 시장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3월 중 닭고기 수입은 5천1백11톤으로 전월 3천17톤에 비해 69%가 증가했고 전년 동월 4천7백88톤에 비해서도 6%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4천3백82톤이 수입돼 전체 수입량의 85% 이상을 차지했으며 브라질 4백76톤, 덴마크 2백54톤이 수입됐다.

부위별로는 다리육이 4천5백44톤이 수입돼 전체 수입량의 88%를 차지했다.

이처럼 닭고기 수입이 증가하고 수입량 대부분이 미국산 다리육에 집중된 것은 닭고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내 사정으로 인해 밀어내기식 수출이 성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미국내 재고 소진이 쉽게 해소될 기미가 없어 수입량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수입된 닭고기가 소비부진으로 인해 대부분이 수도권 일대의 냉동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

수입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로의 닭고기 수출이 중단된 이후 미국내 닭고기 재고가 크게 증가해 재고 소진을 위해 쇠고기 수출업체들이 국내 패밀리업체를 통해 막대한 양의 닭고기를 밀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닭고기 오퍼가격은 조금씩 오르고 수입량은 낮아지는 추세에 있지만 오는 6월이 지나야만 누적된 재고량이 해소돼 예년수준을 회복할 듯하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한국육류수출입협회는 “미국에서는 지난해 말 수출전용물량이 일순하자 재고량이 전년 동기보다 5% 늘어났고 도계수수와 부화수수 증가 등 생산량 증가로 2005년 12월말 현재 다리육 재고만 9만톤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닭고기 수입이 증가했지만 국내 사정은 생산량 증가로 인해 산지 닭값과 병아리 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양계협회 조사에 따르면 18일 현재 산지닭값은 kg 당 1천원이며 육용병아리 실용계는 2백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초 업계 관계자들이 우려했던 닭값 하락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축산신문]



## 지역별 축산대책협의회 뜬다

### 농지법 개정·식품안전처 신설 등

### 축산 현안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축산발전협의회가 지역별 축산대책협의회를 구성, 주요 축산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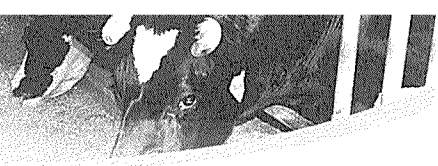
축산발전협의회는 지난 18일 농협중앙회 2층 회의실에서 제2차 축산발전협의회회를 열어 이같이 결의하고 다음달 10일 전국축협조합장회의를 개최, 한·TA, 농지법 개정, 정부의 식품안전처 신설 등에 대한 전국 축협조합장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날 윤상의 축산발전협의회 회장은 “각 도별 협의회장이 중심이 되어 축산단체 지부와 공무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축산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각종 현안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회장은 “이번 축산대책협의회는 주요 정책에 대한 대정부 건의와 각 지역구 소속 국회의원과의 사안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일종의 압력단체 역할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상균 농협중앙회 이사조합장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지법 개정관련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조합장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회의원 방문활동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번 국회 회기중에 반드시 조일현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축산발전협의회 사무국은 자료를 통해 한미FTA체결시 전체 축산업 생산액은 약 1조원 감소하고 쇠고기가 협상 전략품목 1위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조직법(식품안전처 신설)개편에 대해 정



부가 올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을 개정해 올 7월 1일 식품안전처를 신설한다는 계획임에 따라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정부·대국 활동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한국농어민신문]



### 축산농가 농지법 개정 요구 왜?

농지에 축사신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토록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축산업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9월 26일 조일현 의원 등 20여명의 의원들도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농지제도의 개정을 시도했으나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농지법상의 문제점과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일선 양축농가와 전문가들을 통해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 ▲농지법 개정 왜 해야하나

축산업계의 법안개정 요구 핵심은 가축밀집사육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과 가축질병 예방 차원의 축산농가 분산이 시급하지만 국내 국토여건상 농지 외에 축사 이전 부지선정이 어렵다는 데 있다.

현행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내 축사를 설치할 수는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농지 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 지자체 농지관리위원회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 농지 전용이 어렵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농지 내에서 축사신축을 사실상 반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전용에 따른 대체용지조성비용은 올 1월 농지법 개정에 따라 ha당 최고 5만원으로 줄었으나 준공 후 취득세, 등록세 등 과도한 세금납부 등으로 농

지내에 축사신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토지 개량시설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등은 농업용 시설로 인정받고 있어 농지 전용 절차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지만 축사는 예외로 규정, 같은 농업분야 임에도 축사만 차별 받는 등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 내 축사신축을 통해 축산업과 연계, 자원순환 영농을 희망하는 경종농가의 경우도 자기소유 농지에 자유로운 축사건립을 못하는 등 현행 불합리한 농지법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 ▲법안개정 지연

농림부 내 관련 부서인 축산정책과와 농지과는 농지에 축사신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방법상에 있어 농지과는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축산관련 부서는 축사를 농업의 일부로 인정해 아예 전용없이 농지에 축사신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경종농가의 경우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와 농지관리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에 축사를 허용하는 규제완화는 타 품목농가들의 농지 규제완화 요구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연 평균 약 1만3219ha의 농지가 감소되는 등 지금도 난 개발과 불법 용도변경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축사가 들어설 경우 인근 농작물 재배농가와 지역주민들의 민원, 생활환경 문제도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일현 의원 등 20여명의 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 ▲바람직한 농지법 개정 방안은

농지법상 축사부지를 농지로 정의하면 전용절차 없이 농지조성비 면제와 저렴한 지대로 축사를 신축할 수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농업진흥지역 내 축사 설치시 별도의 규제가 없을 뿐 아니라 대체농지 조성비 등의 농가 부담금도 없다는 것.

또 농지내 축사 난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농지전용 허가 대신 친환경 축사의 설치·운영계획서를 시·군에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 축사시설 내역, 가축사육 규모와 밀도, 가축분뇨 처리방법, 악취방지시설 등의 환경대책도 포함한다는 방안이다. 또 승인 후 오분법과 악취방지법을 위반하고 개선명령 불이행, 축사를 타용도로 활용 및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방치할 경우 승인을 취소토록 관련법령 정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축산법상 친환경축산의 정의에 이러한 사항을 규정해 농지전용허가를 대신토록 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 ▲ 육원방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학장

우리나라는 축산과 경종이 분리돼 있다. 축산농가가 배출한 가축분뇨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고 경종농가는 유기질 비료를 쓸 수 있는 자원이 없어 친환경 순환 농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농지 내에 축사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축사가 거주지역 가까이나 산으로 올라가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축산농가들은 인근 주민과 환경문제로 마찰을 빚

는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현재 쌀이 남고 있기 때문에 농지활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농지를 여러 각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순환농업을 이루려면 축사가 농지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특히 화학비료로 지력이 감퇴돼 있는 국토 보존을 위해, 장기적으로 국토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정부가 농지 내 축사시설 설치를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

인구밀집지역이나 산지보다 농지에 축사설치가 가능하다면 오히려 마찰을 줄일 수 있다.

한편 농정국에서는 이 문제를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환경에 관련된 문제는 별도로 풀어야 한다. 축산분뇨를 어떻게 사용하고 분뇨냄새를 어떻게 줄이고 얼마나 활용할지와 환경에 직 간접적으로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축산단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한국농어민신문]



## 농진청, 美 대학에 축산분야 해외연구실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는 미국 텍사스 A&M(Agricultural and Mechanical) 대학에 쇠고기 품질 연구를 담당하는 해외연구실을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축산연구소는 지난해 A&M대와 축산과학기술협력 협의각서(MOA)를 체결해 지난 11일 한국축 연구원이 상주하는 해외연구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텍사스 A&M대는 축산 연구분야에서 수년동안 미국 내 1위를 차지한 대학으로 축산연구소는 이 대학 연구진과 함께 맛이 뛰어난 살코기형 쇠고기 생산기술



을 연구한다.

축산연구소 영양생리과 강수원 박사는 “그동안 국내 연구진이 국외에 나가 연구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국외 대학에 국내 연구실이 설치된 것은 처음”이라며 “각종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 입맛에 맞는 쇠고기 생산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제주, 돼지콜레라백신 접종 적발

제주지역의 한 양돈농가가 도내에서는 접종이 금지된 돼지콜레라(HC) 백신을 접종했다가 축산당국에 적발됐다.

제주도는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 A농장주 조모(69)씨 등이 지난 1~3월 사육중인 새끼돼지 1천86마리에 HC백신을 접종한 사실을 확인, 농림부 고시에 의거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또 백신 접종 돼지에 대해서는 도내 이동 및 도축을 제한하고 모두 다른 시·도로 반출토록 했다.

이 농가는 T종돈장의 2~3개월생 새끼돼지 4천마리를 분양받아 위탁사육하면서 돼지 호흡기증후군(PRRS) 등 만성소모성 질병으로 일부가 폐사해 가자 서울에서 HC백신을 구입, 접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역은 지난 99년 12월 돼지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선포돼 돼지콜레라와 오제스키병 백신 접종이 금지돼 있다.

[연합뉴스]



### 경기도서 닭 마렙병 잇따라 발생

경기도는 21일 용인시 처인구 모 양계장에서 닭마렙병이 발생해 3만여 마리 중 5천 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앞서 지난 1월 화성과 3월 안성에서도 이 병이 발생, 닭 10마리와 1천400마리가 각각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닭 마렙병이 잇따라 발생하자 각 시·군과 양계농가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닭 마렙병은 예방접종을 해도 연간 5~6차례 발생하는 전염병”이라면서 “이 병에 감염된 닭 일부가 출하되기는 했지만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어서 식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닭 마렙병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며 초기에는 닭의 움직임이 적어지고 마비증세를 보이다 장기에 종양이 생겨 죽는 2종 범정전염병으로 폐사율이 약 10%에 달한다.

[연합뉴스]



### 육류생산량 29위 · 소 도축증량 2위

#### 세계 속 한국축산 수준은... 농림부 200여개국 대 상 통계분석

세계 속의 한국 축산은 어느 정도일까.

농림부가 지난 2004년 기준 농업관련 주요지표를 세계 200여국 및 OECD 30개 회원국과 비교한 ‘통계로 본 세계속의 한국농업’을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육류생산량이 1백55만3천톤으로 세계 29위, OECD 회원국 중 15위로 나타났다.



또 가축사육두수는 소(젖소, 한육우) 2백16만2천두 72위 · OECD 17위, 돼지 8백90만8천두 18위 · OECD 12위, 닭 1억7백만마리 31위 OECD 10위로 나타났다.

특히 농가인구는 3백41만4천명으로 세계 66위 · OECD 6위, 경지면적은 1백84만6천ha로 세계 95위 · OECD 21위,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139위로 농업환경이 영세한 실정인 가운데 축산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앞서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축산물의 경우 소의 두당 도축중량이 3백62kg(지육기준)으로 세계 2위 · OECD 2위이며, 돼지는 84kg(지육기준)으로 세계 25위 · OECD 14위다. 젖소의 두당 산유량은 7천2백86kg으로 세계 9위 · OECD 7위이다.

육류전체 생산량은 1백55만3천톤이며, 이중 쇠고기(지육기준)는 20만7천톤으로 세계 43위 · OECD 18위이며, 돼지고기(지육기준)는 96만톤으로 세계 18위 · OECD 13위이다. 닭고기(정육기준)는 28만8천톤으로 세계 36위 · OECD 15위이며, 오리고기(정육기준)는 9만8천톤 생산으로 세계 4위 · OECD 2위이다. 우유 생산량은 2백55만5천톤으로 세계 39위 · OECD 23위로 나타났다.

육류 전체 수출액은 3천4백만달러 세계 39위 · OECD 22위로 나타난 반면 육류 전체 수입액은 10억 6천2백만달러로 세계 12위 · OECD 10위로 육류 수입국임이 확인됐다.

[축산신문]



## 충남지역 올해 브루셀라병 5명 감염

올해 충남지역에서 5명이 인수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홍성군 보건소가 축산 농가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A(55.여) 씨가 양성 반응을 보여 보건소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공주시에서도 2명, 연기군에서 1명, 태안군에서 1명이 발병해 치료 중이다.

가축의 경우에는 올해 도내 16개 시·군 72개 농가에서 소 707마리가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2004년에는 125개 농가에서 612마리가 발병하고 인체 감염이 8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는 355개 농가 2천426마리가 감염되고 25명이 발병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홍성군에서 한 환자가 감염 사실을 모르고 두 차례 척추염 수술을 받은 뒤 6개월 만에 치료를 시작한 사례도 있어 지속적인 방역 활동과 주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축산농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 2015년 칼로리 자급률 목표 48%, 주식용 곡물자급률 54%.. 사료용 포함시 29%

정부가 오는 2015년 목표치로 설정해야 할 칼로리 자급률이 48%로 권고됐다.

품목별로는 쌀 90%, 채소류 85%, 과일류 66%, 우유제품 65%, 육류 73%, 수산물 58% 등이다.

농림부는 식량자급률 자문위원회가 1년간의 작업을 거쳐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의서는 ▲품목 자급률 ▲칼로리 자급률 ▲주식용 곡물자급률 ▲사료용 포함 곡물자급률 등 4가지 유형



별로 2015년 목표치를 설정,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 여건 변화에 맞춰 5년단위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자문위는 2015년 목표치로 칼로리 자급률의 경우 지난 2004년 실적(46.7%)보다 다소 높은 48.0%를 제시했다. 이는 일본의 2015년 목표치(45%)보다 높은 수준이다.

품목 자급률 목표치로는 쌀 90.0%, 맥류(보리와 밀) 4.0%, 서류(감자) 99.0%, 채소류 85.0%, 우유류 65.0%, 육류 73.0%, 수산물 58.0% 등 대체로 2004년 자급률보다 낮춰 제시했으나 콩류는 42.0%로 2004년의 25.0%보다 크게 높여 잡았다.

육류중 쇠고기는 46.0%, 돼지고기 81.0%, 닭고기는 100%이고 수산물중에서는 어류 41.0%, 패류 83.0%, 해조류 100% 등이다.

또 주식용(쌀, 보리, 밀) 곡물자급률은 2004년 실적(65.3%)보다 낮은 54.0%, 사료용 포함 곡물자급률은 2004년(26.8%)보다 높은 29.0%로 각각 제시됐다. 자문위는 농림부가 농업계의 요구에 따라 농정의 중장기 지표로 활용할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해 작년 4월 구성된 자문기구로, 그동안 연구용역과 10여 차례의 전체회의 및 토론회 등을 실시해 이번 건의서를 채택했다.

한편 자문위는 건의서에서 바람직한 식생활 권장, 한국형 식단 개발, 음식물 쓰레기 절감 등 식품 소비 측면의 정책 노력을 강화하고 농가에 대해서는 직불제 확대를 통한 소득안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생산조정제의 재도입과 사료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쌀의 생산과잉을 완화하고 쌀 가공품의 개발, 수입쌀 재고미의 특별처분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정부관계자 한·미 FTA 관련, 농민 자극 발언 쏟아내 '파문'

### 권태신 차관 “개방 피해보는 소수가 시끄럽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 농민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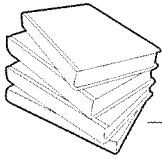
권태신 재정경제부 2차관은 최근 LG(엘지)경제연구원 20주년 기념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 경제 개방과 교역 확대를 강조하면서 “개방으로 혜택을 보는 다수는 침묵하고 있는 반면 개방을 통해 피해를 보는 마이너리티(소수)가 시끄럽고, 시위문화도 정착이 안돼 이들이 여론을 좌우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발언에 앞서 “국산 쌀은 국제 평균가격에 비해 4배, 참기름은 10배나 비싼 만큼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사실상 농업분야 종사자들을 ‘시끄러운 소수’로 묘사했다.

또 김현중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초청 강연에서 “국내산 쇠고기값은 1kg당 43.7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며 한·미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재관 전 농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미 FTA를 추진, 엄청난 농업분야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면서 “한·미 FTA 저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농민들을 ‘시끄러운 소수’ 운운하는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농민신문] ㊦



후나세 · 스케 (지은이),  
김하경 (옮긴이),  
기준성 (감수) |  
중앙생활사

‘암환자의 80%는 항암제와 방사선 요법 등으로 살해되고 있다’

## 『항암제로 살해당하라』

‘암환자의 80%는 항암제와 방사선 요법 등으로 살해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고발서다. 암 전문 학자들이 증언하는 전율할 만한 내막과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일본군 731부대의 학살극과도 같은 거대자본의 화학이권에 얽힌 악랄한 암산업의 진상을 낱알이 밝히고 있다.

최근 부모들의 관심사인 백신의 위험성과 맞물려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대체 의료에 관한 최신 자료집과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 등도 함께 담았다.

후나세 스케 (船瀬俊介) - 1950년 후쿠오카현에서 태어나 와세다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일본소비자연맹에 들어가 ‘소비자 리포트’의 편집, 소비자 상담 등의 활동을 했다. 현재 소비자·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평론, 집필, 강연활동을 하며 (주)옥상녹화를 운영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합성세제는 필요없다>, <위험한 화장품>, <진짜 술을 마시자>, <악덕 세일즈맨 퇴치법> 등이 있다.

## 영화에서 길어올린 사유의 향연

### 『철학, 영화를 캐스팅하다 - Philosophy + Film』

영화의 한살이가 너무도 짧다. 지은이는 이런 현실이 시장 논리 때문만은 아니라고 진단한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영화를 만나는 방법의 서투름 때문은 아닐지 되묻는다. 성마르게 다가가서 서둘러 즐기고 조금하게 판단한 뒤 황망히 잊어버리는 관객들의 성급한 심성 때문은 아니라고.

전작 <쾌락의 응호>에서 “음미되지 않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며 삶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음을 생활 속의 여러 단상을 통해 보여준 지은이는 세상의 경쟁 논리에 혁혁대며 사는 사람들, 또는 무거운 이성의 감옥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영화 속 상상을 빌어 인간다움과 행복의 의미를 묻는다.

“동사서독”에서 “친절한 금자씨”에 이르는 스물 아홉 편의 글은 존재론과 인식론, 윤리론을 거쳐 행복론을 향한 끈질기면서도 즐거운 발걸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쉬우면서도 무게 있는 글 속에서 지은이의 독특한 글쓰기를 느낄 수 있다.

“영화 <매트릭스>가 다루는 것은 단지 가짜와 진짜가 혼란스럽게 뒤섞여 생기는 곤란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 영화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가짜가 진짜를 대치하고 맞서고 통제하고 지배하는 끔찍한 상황에 주목한다. 물론 여기서 ‘현실’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 가짜와 진짜에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없어지면 독재자가 국가를 제멋대로 통치하듯이 가짜들도 그런 잔인한 독재자가 되어 진짜들을 무자비하게 억압하는 세계를 상상해볼 수 있다. 영화는 그러한 상상력을 소재로 삼는다.” - 본문 74쪽에서

1  
철학,  
영화를  
캐스팅  
하다

이왕주 (지은이) | 효형출판